

약품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려면

여동찬/한국외국어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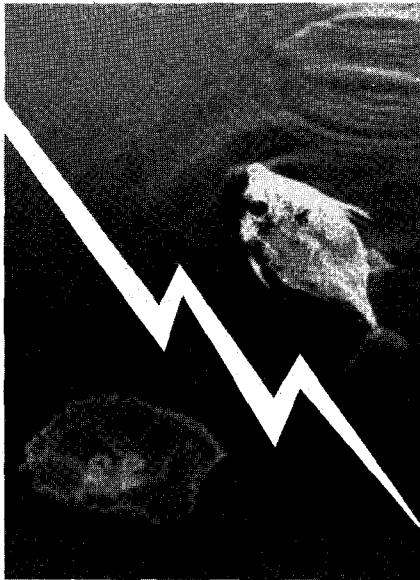
지난 달에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건강관리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특히 음식문화 식생활습관, 절제부족과 지나친 성취욕이 이나라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 걱정없이 지낸단든지 건강문제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나라 국민의 건강관과 건강관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이 일망정 건강에 대한 그들의 관심만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다. 합리적인 정신으로 사는 서양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말 그대로 스스로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일로 일생을 보내면서 재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다음 달에 따로 다룰 소위 「몸보신」의 문제는 고사하고 몸을 혹사시키는 한국 사람만큼 약을 찾고 즐겨 복용하는 민족은 아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향을 알아주듯 한국정부는 「약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약품시장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나라에서는 개인이 원하고 돈만 있으면 수면제나 소화제로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약품에 이르기까지 구입하지 못하는 약이 없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치사량의 약품이라도 구입할 길이 있다.

선전에 넘어가기 쉽고 약을 즐겨 복용하는 한국사람들의 경향을 너무나 잘알





●●
 약품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며 각자의 체질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있는 의사의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

고 악용하는 이나라의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행해지는 과잉, 허위광고의 덕택으로 모든 사람은 약품에 관한 한 어지간한 실력을 가진 약사보다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아프면 무슨 약이 잘듣고 좋다는 것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의사의 진찰 처방 따위나 약사의 조언도 필요없다. 약방에 가서 스스로의 처방에 의해 약을 골라 복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고 한다.

수십년전부터 의사의 진찰, 처방없이 소화제나 아스피린 한 알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의 제도에 익숙해진 나로서는 한국사람들이 누리는 이 분야의 자유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약방을 경영하는 약사에 의하면 약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의사의 진찰, 처방을 받을 생각도 없이 찾아오는 고객은 70-80% 정도이며 그중 또한 약사의 의견도 묻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상식과 판단에 의해 약을 선택하여 복용하는 경우는 60-70% 정도라고 한다. 그들은 약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학이나 약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과연 자기 증세와 체질에 알맞는 약품,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약품을 선택하겠는가? 그들은 약품을 기호식품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크나 큰 착각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지난번 지적했듯이 지나친 물질적 성취욕과 출세욕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긴장상태와 피로 때문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안정제나 진정제에 의존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런 약품을 찾는 고객(약을 찾는 사람들 중 10%, 그중 여성은 90% 차지)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안정제란 부작용이 많아 특히 임신부들의 경우 자칫하면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끼쳐 기형아의 출생을 유발할 위험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마약의 복용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가까운 영향을 끼치는 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무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품의 과용풍조에 관해서는 언론매체들과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감독관청의 책임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비호 아래 약품광고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언론매체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사명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국민의 알 권리란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알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언론매체들은 내용을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내놓는 과잉광고를 서슴치 않고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계몽이 중요한가 아니면 돈에 혈안이 된 제약회사들과 언론매체들의 수입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에 양심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좋으려만— 약학이나 약리학에 기본지식마저 없는 일반국민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약품의 가공할 부작용을 깨우쳐 주기커녕 그들을 오도하고 약으로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언론매체들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위의 부담을 말끔히 없애는 무슨 소화제, 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무슨 약이 있으니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아무탈이 없다는 식의 광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실제로 한국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 중 지금 이를 용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텔레비전의 화면을 대하고 그때마나 「무슨 약품이 있기만 하면 무사하다」는 식의 광고에 접하는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면을 통한 광고의 힘과 인간의 취약성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라 하겠다. 아니면 국민보건문제에 아랑곳없이 광고에 의한 수입이나 장사가 잘되는 제약회사들의 풍부한 「회사금」에 더 큰 관심을 두는 탓 일지도 모른다.

약이란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독물이란 사실을 잊어

선 안된다. 약품의 원리는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원리이나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양을 조절하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원리인만큼 사용량을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덜어주고 병균을 제거해야 할 약품은 다시 독물로 변해 고통에 시달린 인체, 병균이 기생하는 기관마저 마비시켜 죽이고 마는 것이다.

몇십년전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임산부들이 복용한 약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형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의약계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극단적인 예라고 하더라도 한국국민은 약품의 과용으로 인하여 초래될지도 모를 엄청난 결과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약품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며 각자의 체질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있는 의사의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서양에서는 20세기초까지 제약행위가 성했으나 그 엄청난 폐단을 고려하여 정부당국은 법을 제정, 약품의 무질서한 유통을 바로 잡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한국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세계각국에서 유해성약품으로 인정되어 판매금지처분을 받든지 사용제한된 37종의 약품성분이 정부당국의 묵인 아래 124개 제약회사의 298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국민에게도 약품광고를 하는 회사와 언론매체에도 호소하고 싶지만 약품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당국 여러분에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만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